

국가교육위원회 제67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6년 4월 9일 (목) 15:00 ~ 17:53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김경희, 이광호
(위원) 김 건, 김 용, 김주성,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연취현, 유민봉, 윤건영, 이보미, 이슬기, 이 현,
장신호, 전은영
(총 17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21인 중 15인 출석(17인 출석 예정)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제67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 굿은 날씨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절도 바뀌었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도 모든 기구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무처, 또 전문위원실 등등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올해 최대 우리의 책무가 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지원단 등은 회의를 하면 거의 오전, 오후에 걸쳐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도 막바지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 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6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입니다. 지난 회의 때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45인으로 구성하였는데 공석이 발생해서 1명을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 다음 안건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입니다. 국민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위원회에 총 3,93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구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그리고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입니다. 지난 66차 회의에서 의결된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현재 운영 중인 9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주요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다음은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입니다. 사교육 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교육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여 추가 구성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 및 2026년도 실시계획(안)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결과와 올해 실시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③ 안전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공개
- (보고안건)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 (보고안건)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공개
- (보고안건)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공개
- (심의·의결안건)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 공개
- (보고안건) '2025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 및 2026년 실시계획(안)' 비공개

④ 활동 보고

- (간사)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회의자료 7페이지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8차 회의가 4월 3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방향 등 중장기 교육여건 제도 개선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4월 8일 수요일에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건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 다음은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가 3월 19일 목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의견수렴 추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논의되었던 의견수렴 추진 관련 논의는 제66차 회의에서 보고된 사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제12차·제13차 회의가 각각 3월 16일 월요일, 4월 6일 월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발제와 논의가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제7차·제8차 회의가 각각 3월 12일 목요일, 3월 26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7차 회의에서는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관련 논의, 8차 회의에서는 초광역 RISE와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제7차·제8차·제9차·제10차 회의가 각각 3월 20일, 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에서는 학생평가 관련 개선 필요사항, IB 운영 사례, 대입 전형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제6차·제7차 회의가 3월 13일 금요일, 3월 27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중립성, K-시민교육 국가 최소한의 원칙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있었으며, 제7차 회의에서는 시민성 교육에 대한 국가전략 제안이 있었습니다.
-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제10차·제11차·제12차·제13차 회의가 3월 17일, 3월 24일, 3월 31일, 4월 7일에 있었습니다. 영유아 특위도 특별위원회 보고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된 발제와 특별위원회 보고서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제7차·제8차 회의가 각각 3월 13일, 3월 2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개별 의제에 대한 구체화 논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고서 집필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제10차·제11차 회의가 3월 18일 수요일, 4월 3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각각의 정책제

- 안에 관련된 위원별 발제가 있었고, 제11차 회의에서는 인재 성장, 인재 선순환, 인재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보고서 집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3월 25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된 정책 검토 과제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제6차·제7차 회의와 AI교육 정책랩이 개최되었습니다. 6차·7차 회의는 각각 3월 13일, 3월 27일에 개최되었고, AI 정책랩은 교육부, 그다음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그리고 Google Education 팀이 함께 각 국가별 AI교육 정책 수립·운영 사례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통합지원단의 제3차·제4차·제5차·제6차 회의가 3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그리고 제6차 회의는 4월 4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 중장기 발전계획 시안 작업을 위한 의제별 보고서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대전환기 국가교육 비전 포럼이 3월 27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께서 세계경제 질서 개편과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발대식이 어제 4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총 323명으로 규모도 늘어났고 임기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서 보다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1차·2차 심사가 3월 19일, 3월 31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2기 국참위 구성 결과 안전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가교육과정 관련된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

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요청이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 확대, 그리고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시간 확보,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에 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 위원) 위원장님,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같은 경우는 실제 본위원회에서 언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게 됩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세 번의 심의·의결을 하는 절차를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필요한 절차는 요청된 내용의 개정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좀 검토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령상으로 보면 우선은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켜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 …)

그러면 활동 보고는 보고한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주요 내용

가.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 (간사) 심의·의결안건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에 대해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가 위촉(안) 보고드

리겠습니다. 자료집 16쪽입니다.

- 지난 위원회의 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2기 전문위 45명 구성이 되었는데 회의 이후 위원 한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결원이 발생한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여 전문위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기 전문위 임기 만료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덕제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한 분 더 모시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그것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의논이 있었지요?
- (보고자) 예. 어제 전문위원회에 의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서 지난 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선된 부분을 전달했고,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말씀은 나누었지만 그것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은 공동위원장 체제에 대해 현재 위원장의 의견을 좀 고려하면서 국교위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도 있었고, 또 전문위에 공동위원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 또 국교위법 시행령에 1인으로 위원장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 (손덕제 위원) 지난번에 그런 것 다 검토를 하고 우리 국교위 본위원회에서 한 명 더 하기로 여기 그때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 (보고자)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아마 의견으로 말씀 주신 내용이고, 위원장님과 또 상임위원님이 같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사안인데 그래도 지금 전문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들은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는 어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저와 상임위원님 두 분이 의논하기를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나온 얘기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 상임위원님과 함께 의논해서 그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덕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우리가 지금 교육의 중립적인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2명의 위원장을 두고, 다른 데도 2명의 위원장을 둔다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도 취지에 공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회의록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만약에 위원장을 없앤다고 하면 여기서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난번 논의 이후에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묻고 하는 과정은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된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손덕제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이 특별히 규범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아마 위원회 내부에 공동위원장 체제를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위원장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추천된 분들과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하고 '(「예」하는 이가 많음)'이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 전문위원회에서도 공동위원장 체제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확실치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방금 전문위원회의 답변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답이 온 겁니다. '전문

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문위원회에 한번 물어보자, 물어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전문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확실히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고요. 그중에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교위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또 현재 한 분의 전문위원장님께서 의견도 내셨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양 상임위원님과 함께 제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된 것은 정치중립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론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전문위원회에서의 소견도 있겠지만 우리 본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손덕제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다시 하위 기관인 어떤 위원회로 내려가서 그 의견이 다시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아니, 지금 본위원회에서 제기된 논의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난 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느냐는 것이 미정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의논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 (연취현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 이해하기로는 손덕제 위원님께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고, 위원장님께서 아마 전문위원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으로 준비하시겠다는 취지로 알아들었고, 사실 저희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한 분만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1기 때부터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신 부분은 특히 한쪽 성향으로만 편향되는 경우에 소수 의견들이 완전히 묵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 차원에서 위원장을 2명 세워 양쪽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특히 손 위원님이 이미 본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안하셨고 위원장님이 받으셨는데 지금 손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위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 좀 의아해서...

- (위원장) 조금씩 말이 다른데요. 그 당시에 저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회에서 요청하실 것 같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확실치 않았고, 제 짐작으로는 전문위원회가 요청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은 양 상임위원님과 상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 그다음에 위원장을 꼭 공동으로 해야만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그리고 법률에는 1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위원회 위원들 중에 소수라도 공동위원장 체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의논을 한 상태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의외로 전문위원회 내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와 상임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를 받아서 의논을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연취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들 중에 우리 국교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활동하신 경험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공동전문위원장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요청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이미 위원장이 계신 입장에서 또 한 명의 위원장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실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공동전문위원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회의 논의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 (김주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회는 우리 하위 기관이고 우리 국교위 전체를 움직이는 큰 가치관의 문제를 우리 본위원회와 위원장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양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가 양보하기보다는 저는 전문위원회, 본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꼭 상위, 하위 기구의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지 않고요. 물론 최종적인 절차는 본위원회가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각 전문위원회나 각 특별위원회가 그 운영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율성이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운영은 그렇겠지만 조직은,
- (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전문위원회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 못한 상태에서 아마 공동위원장을 요청할 것 같다, 희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 의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상임위원님들과 의논을 거쳐서 전문위원회에 부쳤더니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그런 정도의 의견이 나온 겁니다. 국교위가 판단을 하시라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 이것이 공동위원장을 하느냐, 현 체제를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특별한 큰 관심은 없습니다. 큰 관심은 없는데 다만, 그것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이나 회의진행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손덕제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들을 중립성이라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위원회로 생각했을 때 특히 중요한 위원회나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서는 2명의 위원장이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다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동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때 한 명 더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저는 전에 회의할 때 손덕제 위원님 발언을 듣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치중립성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시다. 전문위원회에서도 그런 보고도 일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 그리고 매주 회의할 때마다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문위원회에 물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큰 차이는 없지만 절차를 그렇게 저는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의를 전부 양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주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더 드린다고 그러면 정치중립성이라든가 교육의 중립성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현대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양극화와 교육계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이라는 부분으로 그것이 묻혀서는 안 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예.
- (박영환 위원) 지금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난번에 차정인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셨던 회의록을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위원장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논쟁점이 지난번에 공동위원장 체제를 제기하셨던 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국교위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안전화되어서 정리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공감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곧 그것이 국교위에서 의결된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전문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받으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지금 준비된 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양 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교위 기관의 문제는 위원장이 4명이든 5명이든 이런 집단적으로 논의하는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미비함, 뭔가 위원장의 재량권이 무한정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것이지 지금 양 위원장을 둔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위원장 한 명을 두고 규정에 맞게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논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논의가 정치적 중립성과 아주 민감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우리 양 상임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 봤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연취현 위원)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향후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회의 때는 손덕제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양쪽 전문위원장 두 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의결은 하지 않았어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그렇지 않다고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전문위원회의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을 반복할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논의라고 하시니까 전문위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님들과 결정하셔서, 대신 그때 말씀하셨던 뉘앙스를 제가 알아듣기로는 전문위원장 2명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내용이 마무리되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발언을 해석해 버리면 자꾸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손덕제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후속적으로 절차를 이른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양 상임위원님의 의견을 물어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표한 이후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했는데 결과를 반복했다고하시는 것은 정확한 단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 진행이 이해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전문위원회에서 저희도 의견이 딱 나오기를 바랐는데 공동위원장을 요구하는 발언이 한마디도 안 나오신 겁니다. 그것이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청하든지 명확하게 필요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면 알기 쉬울 텐데, 한 분이라도 요청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손덕제 위원님이 의미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었다면 결정이 쉬웠을 텐데 그 이후의 그런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이보미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
- (이보미 위원) 지난번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공동 체제로 하자는 그 제안도 그냥 제안의 일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발언으로 조금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시행령 근거도 보고 법률도 보고 있는데 구성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회 관련해서 명확하게 법령도 위원장께서 지명을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든 그런 공감대 형성만으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사안인지, 이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기구나 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고, 이 규정대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논이 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꼭 위법은,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손덕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표했던 것입니다.
- (유민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
- (유민봉 위원) 안건으로 의결했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요. 공감을 이루었다 하면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무게감이 있고 그것은 회의 진행에서 상당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 하나가 있고요.

- 공동위원장 체제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왜 저런 원칙이 지난 1기에는 통용되지 않았을까, 그때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위원장 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런 것이 사실 저는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쪽의 목소리가 커서 '그래, 그냥 공동위원장 하지.' 한번 해 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공동위원장이 필요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소급 해석하면 우리도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느냐면 일단 전문위원회의 의견이 그렇게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해서 '그래. 우리 공동위원장 체제 안 할 거야.'라고 결정하신 것도 아직 아니고, '이제 그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두 상임위원님과 의견을 또 나눈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런 정도까지 가신 것이잖아요.
- (위원장) 그렇습니다.
-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들은 기다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 차원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한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양 상임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정해서 다음 위원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에 대하여 안전과 같이 의결합니다.

(의 사 봉 3 타)

나. (보고안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

- (간사) 그러면 다음으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에 대해 속의공론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22페이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15일 64차 회의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참여위원님들에 대한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모집 경과입니다. 첫 번째 국민참여위원 연임위원에 대한 모집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기 활동 참여률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희망 위원을 선정해서 121명의 국민참여위원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 그리고 국민참여위원에 대한 공개모집과 지방정부 추천 요청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했습니다. 공개모집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참여 희망 국민 약 3,935명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추천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34명, 그다음에 시·도청에서 13명 신청해 주셔서 총 47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 공개 모집된 3,935명에 대해서는 추첨과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사위원회 13명을 구성해서 추첨을 3월 19일에 실시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장을 포함해서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내부위원에는 김 건 위원님, 전은영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의견수렴·조정 전문위의 두 분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 그리고 추첨할 때는 지역·연령·성별·직능을 균형 있게 고려하되 학생·청년과 비수도권을 우대해서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3,935명 중에서 선정 인원의 약 2배수인 659명이 추첨되었습니다.
- 추첨한 이후에는 지원서 기반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원서를 토대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민참여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실 분을 고려하되 성별·연령·지역·직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종합적으로 심사하였고요. 659명 중에서 33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위원 선정 결과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500명의 국민참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개모집 331명, 연임 121명, 지방정부 추천 4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표와 같이 남녀, 그리고 10대부터 60대, 지역, 7개 권역, 그다음에 직능을 고르게 구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선정된 500명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며, 참여를 번복하시는 분은 예비위원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4월 23일 오후 2시에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온라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숙의 전문가 강의, 참여형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숙의 역량 교육, 그리고 가벼운 토의를 거쳐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 24페이지 붙임의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개요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자료로 드린 국민참여위원회 심사위원회 명

단과 별첨2의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 계획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진 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 참위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선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참위의 큰 역할이 숙의과정을 통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 보면 발대식 때 숙의 전문가가 강의해 주시고 참여형 활동, 그래서 '숙의원칙 수립 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기 때 국참위는 어떤 형태로 숙의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숙의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혹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의견입니다.
- (보고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자료들은 국참위 위원님 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료집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 위원) 국민참여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상임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문제 중 하나가 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서 나오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여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에 보시면 500명 중에서 71%가 비수도권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교통비, 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물론 온라인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숙의를 하는 것과는 집중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국민참여위원장으로서는 짝막하게 말씀드리면 4월 23일 발대식 때 아마 500명 중에서 일부만 오실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실 것 같은데요. 별첨자료 2에 보시면 2부 활동 안내 중에서 국참위 첫 토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육 의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투표하거나 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한번 모의실험을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들을 한번 모의연습 해 보자는 것이니까 시간 되시면 이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저렇게 국참위가 앞으로 사회적 협의를 하겠구나 하고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또 그 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간주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심사도 상당히 충실하게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지 등을 많이 감안해서 500명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어서 국민 의견수렴을 우리 국교위로 집약시키는 중요한 상설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대로 보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보고안건)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라. (보고안건)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마. (심의·의결안건)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

- (보고자)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안건은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보고안건과 1건의 심의·의결안건이 있습니다.
- 먼저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입니다. 안건집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심의·의결된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따라서 구성·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립니다. 최근 학생들이 어휘력 부족, 독해능력 저하 등으로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해력 문제가 나타나서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하셨습니다.
- 구성방향에서 명칭은 '문해력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16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별지로 따로 문해력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안건집에 끼워두었습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30쪽입니다.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 의견 수합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위원장은 김경희 상임위원님께서 맡으십니다.
- 주요 운영방향은 문해력 정책의 핵심과제 도출과 중장기 방향 설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문해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제의 경우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수시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해력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는 4월 말 이내에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그다음에 두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AI시대, 인문사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서면으로 중간보고 자료 포함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지로 끼워두었습니다.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정책 논의사항과 목차가 나온 특위의 경우에는 보고서 목차를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 다음으로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 심의·의결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집 42쪽입니다.

- 현재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외에 중요한 교육 의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심의·의결하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 43쪽입니다.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규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 확산으로 교육격차의 조기 고착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교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운영방향은 사교육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와 연결 가능한 실효적인 대안 도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른 특위와 마찬가지로 위촉일부터 6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신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3개를 보고했는데 순서대로 논의를 할까 합니다. 맨 처음에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입니다.
- (김경희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경희입니다. 문해력 특별위원회 명단 보면 제가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열여섯 분 모시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로 독서교육, 글쓰기, 어휘력 향상, 이런 것들이 주된 논의의 초점이 될 것 같은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고, 두 번째는 현장 교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교육할 때 이것이 전부 반영되면 좋기 때문에 교직원 3단체한테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 그다음에 또 어휘력 향상 문제에 있어서 한자교육 문제가 논란이 될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 아마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교육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모셨고, 우리가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한글학회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글학회 회장님이 여기에 들어가셨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논쟁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논의 과정 속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개방적으로 논의를 하되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나가서 국민들이나 학생들, 학부모한테 혼란 주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해력 특위 구성·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슬기 위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문해력 특별위원회에서 여기 원인을 진단했을 때 디지털 매체 과사용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제가 명단 상으로 봤을 때 아마 다 총체적으로 해 주시겠지만 주로 국어나 한글, 한자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미디어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셔야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과사용하는 원인이나 메커니즘 같은 것이 조금 더 나와서 보고서 결과가 나올 때 좀 규범적이거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실효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운영하실 때 꼭 명단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포럼이나 발제 통해서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상임위원 이광호입니다. 저희 상임위원 세 분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 부분을 뺐느냐면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서 다른 특위에서 다루는 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독서와 문해력에 집중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특위 구성에서 고려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 위원)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교위 바깥에서 보게 되면 국교위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특위 중에 일부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을 생산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그런 특위의 경우는 굳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특위 중에 일부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특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아까 김경희 상임위원님께서 특위 운영계획 말씀하실 때 조금 뒷부분에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사전에 어떤 내용이 흘러나가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좀 달리해 보면 문해력 이런 문제야말로 오히려 좀 넓게 국교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규범이지 이를 테면 열여섯 분의 위원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논의했으니 이 운영방식 자체가 이렇게 하자고 나중에 알리는 것으로 적절할 것인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특위 운영과정에서 과도하게 비밀주의적인 원칙을 사무처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하는 국교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해력 특위 같은 경우는 아주 넓게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논의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논의를 충실하게 해서 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무르익거나 어떤 가닥을 잡

기 전에 노출되면 논의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가닥을 잡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런 판단은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불필요하게 비밀주의로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주의는 아니고요.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각 특위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특위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 (윤건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연장선상에서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기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문교육, 그리고 세 교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서 균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이 사안이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할 때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 분석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더 아마 학교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도 이미 '소리 뜻 한자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한자교육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한자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뜻, 표음문자 한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표의문자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21명 위원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면 지금 16명이니까 몇 명 더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주로 지금 보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드린 디지털 미디어 이런 문해력에 대한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해서 시·도교육청의 대표성을 띤 분들을 위원으로 보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교육청에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호평을 받고 있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교육청이 앞서서 하고 제가 학생들이 보는 교재도 다 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 흥미롭게 한 자, 한 자 익혀나가도록 하고 그 글자에 따른 응용 같은 것도 아주 즐겁게 배우도록 잘 만든 것을 봤는데, 위원회가 당연히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꼭 위원으로 모시지 않더라도 초청해서 그 사례를 듣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문해력 특위가 한자교육에만 관심을 가지고 막 질문을 하고 그러시는데 한자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서교육 등등 전반적으로 여러 형태,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자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자교육도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꼭 위원으로 들어와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문해력 특위에서 논의하다가 또 요청을 하면 추가할 수도 있겠지요.
- (김주성 위원) 김 용 위원의 문제의식을 저는 좀 공유를 하는데요. 여기 위원 명단을 보면 전부 국어학 교수라든지 어학 교수들이 전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언어는 국어학 쪽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도 좀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위원이 일단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발표하거나 특별한 회의를 할 때는 소비자들 입장을 많이 들을 수 있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또 하나 문제는 우리들이 문해력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독해력으로 상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어휘력 부족 내지 독

해능력 저하라고 그러는데 문해력과 독해력은 다릅니다. 그 문제 의식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해력이라고 그러면 단어 들을 알아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독해력이고, 문해력이라고 그러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사전을 찾아서 단어들을 알아도 전체 문장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한글이 전용화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문해력'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예전에 독해력 식으로 사전 찾아서 어휘력을 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출발해서 단어들을 찾아가고, 단어들의 어원을 찾는 중에 하나는 한자이고, 외국어도 분석적으로 어원을 찾고, 우리말도 어원을 찾아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해력이라고 새롭게 대두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 (반상진 위원) 저도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해력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교위에서 각종 특위와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쪽 보면 물론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데 지역의 분포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몰려있어서 제가 쪽 보면 문해력도 그렇고 국가교육과정 전문 위원회도 그렇고 지역의 인재는 사실 20~30%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별은 그래도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역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영환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문해력 특위가 제안됐었던 초기 문서 내용에 사실상 이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듯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좀 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한자 병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크게 소용돌이가 있었고, 결국은 현장의 반발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기를 결론짓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자교육과 병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 또 두 번째는 위원 구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해력 저하가 되는 이유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가생활이라든지 본인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미디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텍스트를 접하거나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있는 것이 사실이고, 문해력이 저하되는 층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지금 위원 구성을 보면 아까 이슬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도 함께 들어와서, 그리고 미디어 쪽이나 디지털 쪽의 위원들도 함께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차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이 결론이 학교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만 결론이 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교육과정으로 지금 많이 짜여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국어교과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 문제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 적용력과 현장의 수용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날 수 있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력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고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건 위원) 안전 제안서를 주로 작성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서가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문 병기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읽혔다니 제 글 솜씨가 좀 부족했던 탓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제 문해력을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주초에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논의가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했을 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과 같은 취지로 응답을 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한자 병기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얘기가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예전처럼 갑자기 전부 다 한자 병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갈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 병기라는 것이 결국 생각해 보면 잘하는 친구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한자 잘 알면 더 잘해질 수는 있겠지요.
- 다만,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교실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문해력 때문에 지장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윤건영 교육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의문자와 표음문자 이런 위주로 이런 한자가 존재하는구나, '문해력'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글을 해석하는 힘, 능력 이런 것으로 알 수만 있게 하는 교육방식이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안자 중에 일부 된 입장으로서는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 (간사) 그러면 의결안건 의결서 관련해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교육 특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
- (위원장) 예. 문해력 특위 구성·운영계획(안)은 토론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에 대해서도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진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사교육계 현상이 전국 단위로 보면 다 결이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하실 때 전국 단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교육을 너무 강남 쪽에만 포커싱 해서 전국이 다 강남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분석이 면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교육 특위를 구성하실 때도 전국에 있는 분들을 섭외하셔서 전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박영환 위원) 자주 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43쪽의 사교육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보고안건에 대한...
- (위원장) 지금 얘기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쪽에 동그라미 두 번째 필요성의 첫 번째 바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저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현재 우리나라의 극심한 사교육 현상이 마치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져서 사교육이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까지 등장하는데까지 왔다는 식으로 뭔가 문서가 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마치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귀결이 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사교육 대책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왔었고요. 계속 지원 없는 현장의 부담으로

만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원인 분석도 변변치 않았던 것 같고요.

-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교육에는 적용되지만 사교육에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실태까지 나아가는 데 한 역할을 한 것인데 이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문구가 논의의 방향을 마치 예견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것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제가 제안자로서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사교육 특별위원회에서도 저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사교육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었고, 그때 당시에 취지도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사교육 특위와의 차이점이랄까, 어떤 develop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서 과거 특위에서의 성과 내용에서 뭔가 심화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 안 그러면 중복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질문 드립니다.
- (위원장)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이름의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미 비슷한 이름의 특별위원회가 1기에도 있었던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내용과 결과이지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2기의 특별위원회들은 정책

화를 목표로 하고요.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기와는 결과가 달라야 하고 다를 것이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사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구요.

- 또 사교육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경되어 가는 모습을 다 간파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운영방향은 실질적 대책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책과제와 연결이 되는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제가 모든 특별위원회에서 정책화가 될지 안 될지에 논의를 집중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이번 사교육 특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건 위원) 1기 때 운영되었던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부터 1년 동안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정책화, 구체적인 정책 마련으로 특위의 목적성이 정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1기 때 제가 참여했던 특위에서는 조금 넓은,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의 대책들을 정책으로 제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7가지 큰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은 있지만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여건 조성이나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돌봄 수요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평가 패러다임의 혁신, 대입전형 정책의 개선, 그리고 편법·불법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사교육 해소를 위한 범사회적 협력, 이런 대책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제언을 했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도 90페이지 가까이 되는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

고 구체적인 정책화에 대한 내용들은 반영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위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 특위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제가 늘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나오면 즉시 정책화할 것은 정책화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을 것은 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행할 정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고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가려서 양쪽 용도로 다 사용할 것입니다.
- (김용 위원) 1기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모두 살펴보는 않았습시다마는 살펴본 몇 개의 특별위원회 보고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활동하면서 보고서에 담아둔 정책 대안 가운데 얼마나 정책화되었는지 한번 저는 사무처에서 통계 조사를 간단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미진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지금의 대안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5월에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시작하고 오늘 붙임자료로 있는 중간보고서를 봐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특위들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정책화에 이를 것인가라고 하는 약간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 또 하나는 정책화라는 말씀을 몇 번 해 주셨는데 저는 정책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관료들이 결정하거나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정책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실리고 외양도 갖추고 했습시다마는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육 문제는 이미 그들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호응하고 또 사실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할 때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하는데 그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고 이를 논의해 가는 방식이 그 흐름에 잘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지금 국교위 2기 특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논의를 하고 있고, 정책화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안이 나오면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크게 두 갈래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당장 정책화하면서 그 정책을 장기적인 정책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 그다음에 정책화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관료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국회, 행정청과는 당장 지침으로 또는 부령 등등으로 진행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국회에 입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까지 이어져야만 그것이 정책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협의에 들어갈 내용들을 가려내고 판단하고 하는 과정이 또 국교위 차원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화에 대한 개념은 국교위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제가 1기 사교육 경감 보고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내용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들이 나와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필요하면 법 개정 까지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100%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저는 우리한테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는 몇 명이 모여서 법률 연구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페이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사교육 특위를 만들면 저는 1기와 약간 구별화되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법 개정까지 한번 시도해 보자, 그 법 개정이 어떤 법일지는 우리가 특위에서 논의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폭넓게 지역을 돌면서 순회강연도 하고 토론폰도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높여보자, 저는 이 두 가지가 지난 1기 때와 약간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논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국교위에 본위원회도 있지만 소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미 사교육 경감 특위의 1차 보고가 있고 그 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짚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위원회 위원들로 소회의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단순 논의가 아니라 실제 정책 대안을 짜고 그것을 본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 (위원장)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건영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경제학적인 차원이나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왔던 것과 다른 접근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매년 사교육비 통계를 내서 발표하고 그때쯤 되면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 교육감협의회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실제 도심에서 57만 원 정도의 사교육 평균 비용이 나오면 시골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이나 그런 데는 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확일적으로 '사교육 경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경제력이 있는 지역의 사교육을 가지고 경쟁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교육적 접근보다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정책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제가 작년에 그것을 얘기할 때 저는 대책을 내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은 1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사교육비 들여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이 사교육은 단순하게 확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교육 부분은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 (김건 위원) 그전에,
- (위원장) 예, 하십시오.
- (김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에 했던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 특위의 이름을 좀 더 구체성이 드러나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성과 운영방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유아 단계 사교육에 많은 집중도를 두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위 이름도 구체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저는 '사교육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고요.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이 굉장히 광범위한 분석, 심지어 경제학적, 사회문화적 분석까지도 같이 고려한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폭넓게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좁힐 필요가 없고요. 현실성 있는 정책은 광범위한 분석 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논의하고 있는 문해력 특위나 사교육 특위나 이런 것들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문제에 임하는 분들이 정책화를 추진한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하고 그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은 또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으로 뚜렷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저는 특위 위원들과 소통을 하는 편이고 가끔씩 참관을 하면서 당부말씀도 드리고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절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전국 유·초·중등 아이들의 성장에 직접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절박하게 생각한다면 정책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수준도 정말 타당성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그런 면에서 집중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논의는 분명히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논의는 논의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교위 2기 위원들의 참여와 높은 헌신성을 믿고 계속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가 나오면 또 저는 위원장이나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교육부를 만나거나 교육청을 만나거나 국회를 만나거나 적극적으로 정책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아주 좋은 문장으로 당위성을 잘 담아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자, 이런 것이 국교위 본부 측이 할 일이지요.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겨우 하나라도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위들이 지금 9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제가 기대하기는 정책화할 만한 것들이 3개 정도씩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것은 엄청난 기대이고요. 사실 각 특위가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타당한 1개의 변화라도 만들어낸다면 큰 성공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들 아납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알맹이를 건져야 되고요. 잘하면 2개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화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 위원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만들어질 문해력 특위나 사교육 특위도 그런 절박한 마음들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위원장을 맡게 되실 분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족하는 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합니다.
 - 수정 의결 내용입니다.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필요성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교육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교육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로 수정합니다.
- 이상과 같이 수정 의결합니다.

(의 사 봉 3 타)

⑥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2026년 5차 회의는 2026년 5월 14일 개최

㉞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일 동 박 수)